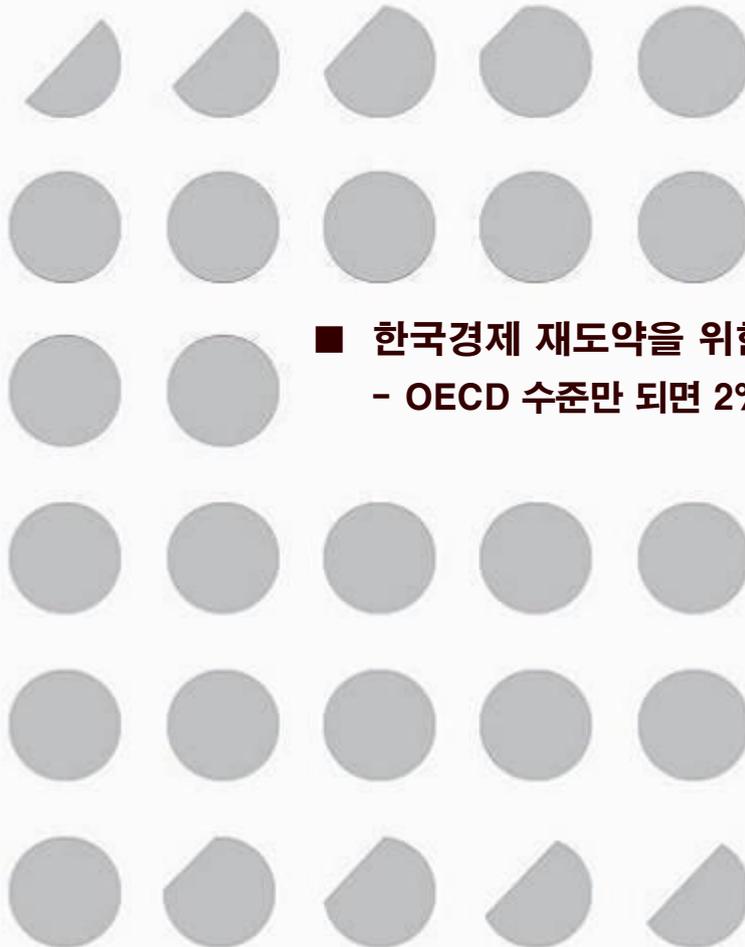


# 經濟週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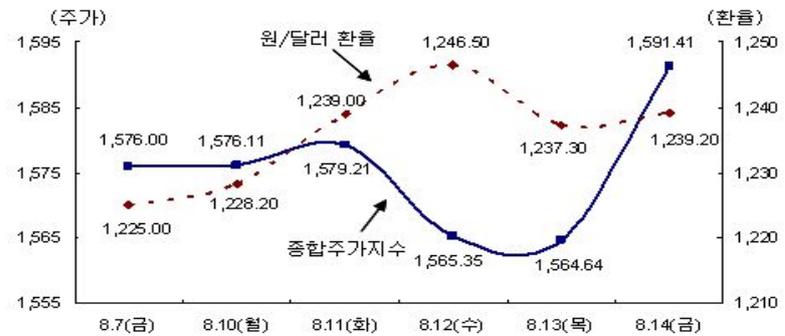
글로벌 경제 위기와 한국 경제



-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소비 확충 방안  
- OECD 수준만 되면 2%p 추가 성장 가능하다.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8.7~8.14)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 1

-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소비 확충 방안
  - OECD 수준만 되면 2%p 성장 가능하다. .... 1

주요 국내외 경제 지표 ..... 22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경제연구본부   : 이 부 형 연 구 위 원 (3669-4011, lbh@hri.co.kr)  
                       : 허 지 은 연 구 원 (3669-4131, me-2@hri.co.kr)

## Executive Summary

### □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소비 확충 방안

- OECD 수준만 되면 2%p 추가 성장 가능하다.

#### 1. 소비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 경제

최근 한국 경제는 내수의 양축인 소비와 투자가 모두 대폭 축소되고 있어, 경제 성장의 한계(저성장함정; Non-convergence trap)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중 54% 정도를 차지하는 민간소비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민간소비는 2007년 3/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5.4% 증가했으나 2008년 4/4분기부터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GDP 대비 민간 소비 비중은 2002년 57%를 기록한 이후 2006년 54%로 떨어진 이래 동일한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으로 볼 때 OECD 주요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평균 60.8%에 비해 약 6.8%p나 낮은 수준이다.

한편, 민간소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지금의 수출과 설비투자 비중을 유지하면서 2008년 명목 기준으로 한국의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OECD 주요국 수준인 60.8%에 도달했다는 단순한 가정 하에서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더니 한국은 실질로 2008년에 2%p 추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2. 국내 소비 침체의 배경과 문제점

우리나라의 국내 소비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배경으로는,

**첫째, 소득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계 소득 증가율은 2007년 6.9%에서 2008년 4/4분기에는 -0.9%로 감소세로 반전되었고, 2009년 1/4분기에는 -3.7%로 감소세가 심화되었다. 또, 교역조건도 악화되고 있다. 순상품교역조건은 2009년 1/4분기 5.4%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2007년 3/4분기부터 줄곧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소득교역조건도 2008년 1/4분기부터 마이너스 증가율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국내 중산층 또한 붕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소득 2~4분위에 속하는 국내 중산층 가구의 비중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1996년 68.5%, 2000년 61.9%, 2006년 58.5%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둘째,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 한계소비성향이란 소득 증

가분의 몇 %를 소비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소득계층 1분위에 속하는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3, 5분위에 속하는 가계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소득계층 1분위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은 1988~1997년 0.8799에서 1999~2007년 0.9124로 상승하였으나, 2008년 이후 0.1123으로 급감하였다. 또, 소득 3분위 가계의 경우 동기간 0.6566, 0.6253, 0.4604로 점차 하락하고 있고, 5분위 가계의 경우도 동기간 0.5088, 0.4788, 0.301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최저 소득층 가계 뿐 아니라 고소득층 가계가 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소비를 늘리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이는 국내 가계들의 보험, 연금 등 비소비지출과 교육 및 보건에 대한 부담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소비 여력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내수 산업이 영세하고 새로운 내수 부문이 육성되지 않고 있다.** 우선 국내 내수 산업의 규모도 매우 영세하다. 대표적인 내수 산업인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우 2007년 기준 자영업자 비중이 25.8%로, OECD 평균 13.8%에 비해 훨씬 높다. 또, 도소매, 음식숙박업과 같은 전통 서비스업의 경우 총근로자 대비 비임금 근로자 비중이 2006년 기준 한국은 47.4%에 이르는 반면 OECD 평균은 18.2%에 불과하다. 나아가, 내수 산업의 경쟁력도 취약한 형편이다. 한국의 2006년 기준 서비스 산업 생산성은 국내 제조업의 58%, 미국의 44% 수준에 불과하고, 민간 R&D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기준 7.3%다. 그 결과 소득 증가에 걸 맞는 새로운 내수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1990년 이후 국내 내수 산업으로는 2004년 정보통신업이 새롭게 등장한 이외에 큰 변화가 없다. 이처럼 내수산업 육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 중의 하나는 한국의 경제 발전 전략이 수출주도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어 온 까닭도 있다. 즉, 1960년대 수출 주도형 개발 전략을 채용한 이래 최근까지도 수출주도산업 육성·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산업육성전략이 추진되어 내수산업 육성이 미흡했던 것이다.

**넷째, 농업이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 국내 농가수는 1990년 대비 2005년에 28% 감소했으며, 농가 인구는 2005년 현재 총인구 대비 7.3%에 불과하고, 65세 이상 경영주 비중도 43.2%로 상승하여 농업 기반이 거의 붕괴 상태다. 더욱이 매출액 3,000만 원 미만 농가 비중이 89.7%에 이른다.

**다섯째, 해외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1990년에서 2008년까지 국내 민간소비는 연평균 약 5% 증가에 불과한데 해외여행 지급 규모는 연평균 12.9%씩 증가했다.

**여섯째,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면서 소비 기반이 축소되고 있다.** 국내 인구 증가율은 1980년 1.6%에서 2007년 0.3%로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 더욱이, 국내 소비

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3~40대 연령층 비중이 2005년 34.7%에서 2009년에는 34%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 침체 현상이 지속될 경우 소비의 성장기여도 하락으로 성장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크며, 고용 부진은 물론 내·외수 경기 양극화 심화, 국부 유출 지속, 도·농간 소득 격차 확대 등의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 3. 소비 진작 방안

국내 소비 비중을 OECD 주요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2%p의 추가 성장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내수 산업과 수출 산업의 균형 발전 전략으로 경제 성장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 내수 산업과 수출 산업과의 균형 성장 전략을 통해 외수 경기 급변에도 전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내 내수 육성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 설비투자과 R&D 등을 포함한 양적 질적 투자 증대를 통해 고용을 증대시켜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소비 기반을 확대해 내수를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녹색성장 관련 투자 촉진 전략의 조기 마련 및 추진 임시투자소득공제제도 등 현행 투자 촉진 제도의 한시적 유지, 기업의 R&D투자 증대 유인책 강화 등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 소비 기반의 확대가 필요하다.** 관광, 교육, 사업서비스 등 해외 소비 규모가 크고 증가 속도가 빠른 산업의 육성·발전을 통한 국내 소비 기반의 확대가 시급하다. 한편, 저소득층의 고용 확대 등을 통해 이들의 소비 여력을 증진시켜야 하며, 고소득층의 소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여 고소득 계층의 국내 소비 촉진을 유도해야 한다.

**넷째, 제2의 농업 부흥을 위한 전략 마련을 통해 농업 부문의 내수 기여도를 제고시켜야 한다.** 비농업인 출자 제한 등의 규제 완화, 우수 법인 농가 신용 보증 확대 등을 통해 농업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기업형 농가 육성을 촉진시켜야 한다. 또, 귀농지원 강화, 농촌지역 인프라 개선, 농촌 생활 여건 개선 운동 등을 통해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

**다섯째,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인구 정책으로 소비 기반의 축소를 방지해야 한다.** 보육 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출산 의지를 제고시켜야 한다. 또, 일과 생활의 불균형, 자녀 교육, 주택 문제 등 저출산 현상을 부추기는 다양한 사회 문제들에 대해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 한국 경제 제도약을 위한 소비 확충 방안 >

- OECD 수준이 되면 2%p 추가 성장 가능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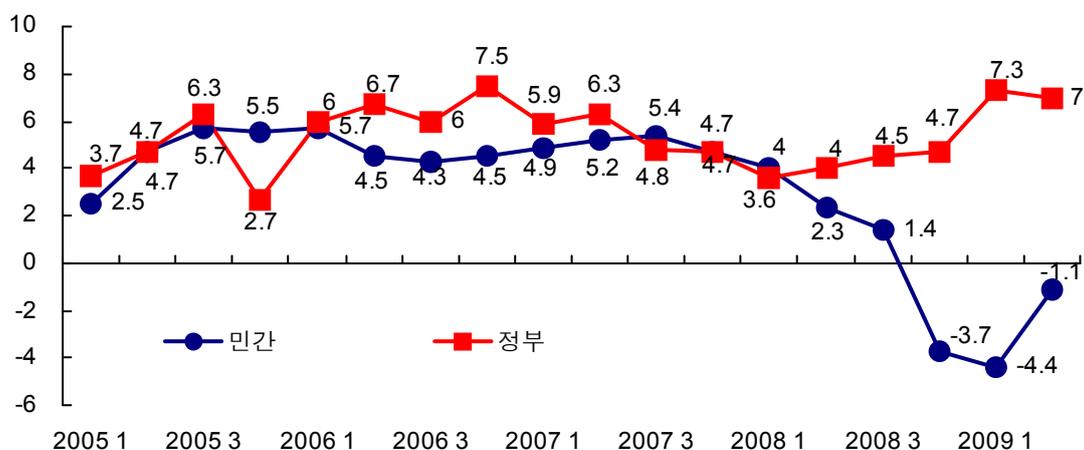
<p>민간소비 침체 심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수 부진 : 민간소비, 설비투자 2008년 4/4분기부터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증가</li> <li>- GDP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 소비 정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소비 비중은 2006년 54% 수준에서 정체</li> </ul> </li> </ul>				
<p>OECD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의 민간소비 비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8년 현재 OECD 주요국 민간소비 비중 평균 6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은 54% 수준으로 6.8%p나 차이</li> </ul> </li> <li>- 한국의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OECD 6개국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경우 → 2%p의 추가 성장 여력 발생</li> </ul>				
<p>소비 침체의 배경과 문제점</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438 828 550 1451"> <p>배경</p> </td> <td data-bbox="550 828 1321 1451">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득 증가율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계 소득 증가율 감소</li> <li>- 교역조건 악화 : 순상품교역조건, 소득교역조건 모두 악화</li> <li>- 국내 중산층 붕괴</li> </ul> </li> <li>2. 가계의 한계소비성향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1분위 가계 급락, 3, 5분위 가계 하락세 지속</li> </ul> </li> <li>3. 새로운 내수산업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수 산업 규모의 영세성</li> <li>- 미약한 경쟁력</li> <li>- 2004년 정보통신산업이 등장한 이래 새로운 내수산업 부재</li> <li>- 수출주도산업 육성 정부 정책 지속</li> </ul> </li> <li>4. 농업 붕괴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수 급감 : '90년 대비 '05년 28% 감소</li> <li>- 미미한 국내 농가 인구 : '05년 현재 총인구 대비 7.3%</li> <li>- 높은 고령 경영주 비중 : '05년 65세 이상 경영주 비중 43.2%</li> <li>- 영세성 : '05년 매출 3,000만 원 미만 농가 비중 89.7%</li> </ul> </li> <li>5. 해외 소비 증가, 국내 민간소비 감소</li> <li>6. 인구증가율 감소 및 주력 소비계층인 3~40대 연령층 비중 감소</li> </ol> </td> </tr> <tr> <td data-bbox="438 1451 550 1653"> <p>문제점</p> </td> <td data-bbox="550 1451 1321 1653">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장 동력 약화로 잠재성장률 하락</li> <li>2. 고용 부진</li> <li>3. 내외수 경기 양극화</li> <li>4. 국부 유출 지속</li> <li>5. 도농간 소득 격차 확대</li> </ol> </td> </tr> </table>	<p>배경</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득 증가율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계 소득 증가율 감소</li> <li>- 교역조건 악화 : 순상품교역조건, 소득교역조건 모두 악화</li> <li>- 국내 중산층 붕괴</li> </ul> </li> <li>2. 가계의 한계소비성향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1분위 가계 급락, 3, 5분위 가계 하락세 지속</li> </ul> </li> <li>3. 새로운 내수산업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수 산업 규모의 영세성</li> <li>- 미약한 경쟁력</li> <li>- 2004년 정보통신산업이 등장한 이래 새로운 내수산업 부재</li> <li>- 수출주도산업 육성 정부 정책 지속</li> </ul> </li> <li>4. 농업 붕괴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수 급감 : '90년 대비 '05년 28% 감소</li> <li>- 미미한 국내 농가 인구 : '05년 현재 총인구 대비 7.3%</li> <li>- 높은 고령 경영주 비중 : '05년 65세 이상 경영주 비중 43.2%</li> <li>- 영세성 : '05년 매출 3,000만 원 미만 농가 비중 89.7%</li> </ul> </li> <li>5. 해외 소비 증가, 국내 민간소비 감소</li> <li>6. 인구증가율 감소 및 주력 소비계층인 3~40대 연령층 비중 감소</li> </ol>	<p>문제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장 동력 약화로 잠재성장률 하락</li> <li>2. 고용 부진</li> <li>3. 내외수 경기 양극화</li> <li>4. 국부 유출 지속</li> <li>5. 도농간 소득 격차 확대</li> </ol>
<p>배경</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득 증가율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계 소득 증가율 감소</li> <li>- 교역조건 악화 : 순상품교역조건, 소득교역조건 모두 악화</li> <li>- 국내 중산층 붕괴</li> </ul> </li> <li>2. 가계의 한계소비성향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득 1분위 가계 급락, 3, 5분위 가계 하락세 지속</li> </ul> </li> <li>3. 새로운 내수산업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수 산업 규모의 영세성</li> <li>- 미약한 경쟁력</li> <li>- 2004년 정보통신산업이 등장한 이래 새로운 내수산업 부재</li> <li>- 수출주도산업 육성 정부 정책 지속</li> </ul> </li> <li>4. 농업 붕괴 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수 급감 : '90년 대비 '05년 28% 감소</li> <li>- 미미한 국내 농가 인구 : '05년 현재 총인구 대비 7.3%</li> <li>- 높은 고령 경영주 비중 : '05년 65세 이상 경영주 비중 43.2%</li> <li>- 영세성 : '05년 매출 3,000만 원 미만 농가 비중 89.7%</li> </ul> </li> <li>5. 해외 소비 증가, 국내 민간소비 감소</li> <li>6. 인구증가율 감소 및 주력 소비계층인 3~40대 연령층 비중 감소</li> </ol>				
<p>문제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장 동력 약화로 잠재성장률 하락</li> <li>2. 고용 부진</li> <li>3. 내외수 경기 양극화</li> <li>4. 국부 유출 지속</li> <li>5. 도농간 소득 격차 확대</li> </ol>				
<p>내수 확충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 성장 전략의 전환 : 내수 산업과 수출 산업의 균형 발전 전략 추진</li> <li>- 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내 내수 육성 토대 마련 : 녹색성장 관련 투자 촉진 등</li> <li>- 국내 소비 기반 확대 : 해외 소비 비중이 큰 서비스업 육성, 저소득층 소비 여력 확대</li> <li>- 제2의 농업부흥을 위한 전략 추진 : 농업 부문 투자 활성화,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등</li> <li>- 저출산 현상 억제 : 여성의 출산 및 사회적 활동 의지 제고, 부동산 등 사회문제 해결</li> </ul>				

## I. 소비 침체 현황

○ (소비 침체 가속) 민간소비는 2007년 3/4분기 직전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지난 2008년 4/4분기부터 마이너스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소비도 2006년 4/4분기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 못함

- 민간소비는 2007년 3/4분기 직전 최고치인 전년동기대비 5.4% 증가에서 2008년 4/4분기 동 3.7% 감소로 반전된 후 2009년 1/4분기까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
- 정부소비도 2006년 4/4분기 직전 최고치인 전년동기대비 7.5% 증가에서 2008년 1/4분기에 동 3.6% 증가 후 2009년 2/4분기 7% 증가로 회복
  - 다만, 정부 소비의 경우 지난 2008년 3/4분기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 들어 확장적인 재정정책에 힘입어 급증세를 보이는 것임
- 한국의 GDP 대비 총소비 비중도 민간소비 정체와 더불어 일정 수준에서 추이하고 있음
  - 한국의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54% 수준을 유지
  - 한국의 GDP 대비 정부소비 비중도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15% 수준을 유지

< GDP 대비 소비 비중 추이(2008년) >



자료: 한국은행.

○ 한국의 경우, 민간소비와 정부소비의 GDP 대비 비중도 OECD 주요국들보다 낮음

- 2008년 기준 한국의 민간소비와 정부소비의 GDP 대비 비중은 각각 54%와 15% 수준으로 이는 OECD 선진국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
- 민간소비의 경우, OECD 선진국에 비해 적게는 2%p 많게는 17%p나 낮음
- 정부소비도 적게는 2%p 많게는 8%p 낮은 수준

< GDP 대비 소비 비중 비교(2008년) >

(명목, 자국통화기준, %)

구분	총소비	
	민간소비	정부소비
캐나다	75	20
프랑스	80	23
이탈리아	79	20
일본	76	19
영국	86	22
미국	87	17
한국	70	15

자료 : OECD.

주 : 소숫점 이하 생략.

○ 한국이 현재의 수출과 투자 비중을 유지하면서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OECD 주요국 평균 수준인 60.8%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국내 경제는 실질로 2%p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sup>1)</sup>

- 한국의 지난 2008년 명목 GDP 총액은 1,023조 9,377억 원인데 이 가운데 60.8% 인 622조 5,541억 원이 민간소비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2008년 명목 GDP는 1,088조 8,971억 원으로 64조 9,594억 원이 증가하여 2008에 명목 5% 성장했던 것이 11.7%까지 성장할 수 있었을 것임
- 2008년 국내 명목 GDP 성장률은 5%임
- 여기에 지난 2008년 물가상승률 4.7%를 빼면 7%까지 성장이 가능해, 실질 2%p의 추가 성장 여력이 발생

1) 실질 GDP 성장률은 명목 GDP에서 GDP 디플레이터를 뺀 값으로 구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민간소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하는 등 단순한 가정을 채택함.

## II. 소비 침체의 배경과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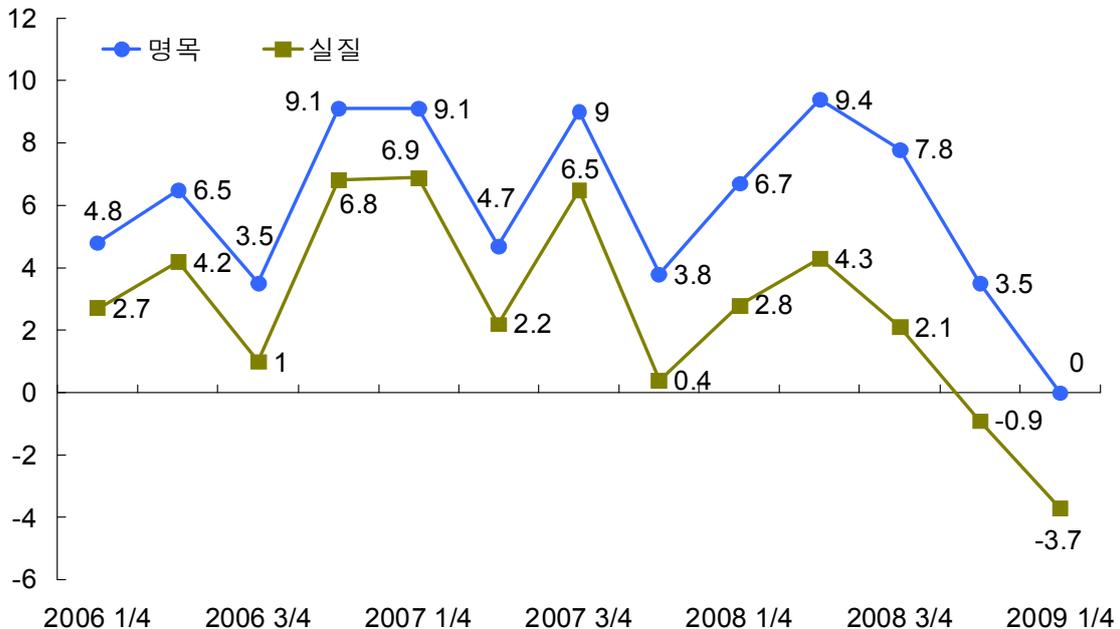
### 1. 소비 침체의 배경

○ (소득 증가율 하락)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 가계 소득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교역조건도 악화되고 있는 등 소득 증가세가 둔화

-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 가계 소득 증가율이 2008년 2/4분기 이후 실질, 명목 모두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실질 기준으로는 2008년 4/4분기부터 마이너스 증가세로 전환됨
-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 가계 소득 실질 증감률은 2008년 2/4분기 4.3% 까지 상승하다 2008년 4/4분기에는 -0.9%로 마이너스 증가세로 반전, 2009년 1/4분기에는 -3.7%로 마이너스 증가세 심화

<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 가계 소득 증감률 추이 >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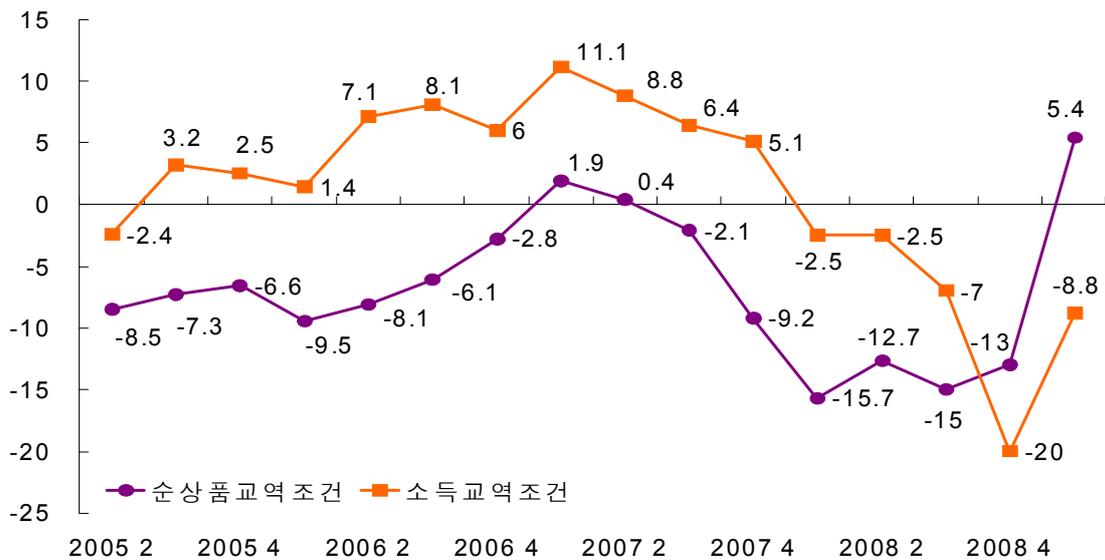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 순상품교역조건은 2009년 1/4분기 5.4%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2007년 3/4분기부터 줄곧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소득교역조건도 2008년 1/4분기부터 마이너스 증가율이 지속되고 있음

< 국내 교역조건 추이 >

(전년동기대비, %)



자료 : 한국은행.

- 한편, 소득 증가율이 둔화되고 교역조건도 악화되면서 국내 중산층 규모가 1996년 68.5%, 2000년 61.9%, 2006년 58.5%로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음

< 가처분소득 기준 국내 중산층 규모 추이 >

(%)

구 분	1996년	2000년	2006년
빈곤층	11.25	15.74	17.94
중산층	68.45	61.88	58.48
상류층	20.30	22.38	23.59

자료 : 유경준·최바울,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 『KDI 재정·사회정책동향(2008년 상반기)』, KDI, 2008년 6월.

○ (한계소비성향 하락) 소득계층 1분위에 속하는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3, 5분위에 속하는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이 지속적으로 하락

- 소득계층 1분위 가계의 한계소비성향 급감 : 소득 계층 1분위에 속하는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이 1998~1997년 0.8799에서 1999~2007년에는 0.9124로 상승하였으나, 2008년 이후 0.1123으로 급감
  - 이는 2008년 이후 소득계층 1분위 가계가 소득 증가분의 10% 정도 밖에 소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 소득계층 3, 5분위 가계의 한계소비성향도 지속적으로 하락 : 소득계층 3, 5분위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이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 소득계층 3분위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은 1988~1997년 0.6566에서 1999~2007년에는 0.6253, 2008년 이후에는 0.4604로 지속 하락
  - 소득계층 5분위 가계의 한계소비성향도 동기간 0.5088, 0.4788, 0.301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계층 5분위 가계의 한계소비성향 : 소득계층 5분위의 2008년 이후 한계소비성향은 0.3018로 2분위 가계의 약 32%, 4분위 가계의 44% 수준에 불과하며, 3분위 가계 0.4604보다 낮음

< 소득계층별 시기별 한계소비성향 추이 >

구 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988~1997년	0.8799	0.7281	0.6566	0.5728	0.5088
1999~2007년	0.9124	0.6957	0.6253	0.5748	0.4788
2008~2009년 1/4분기	0.1123	0.9493	0.4604	0.6810	0.3018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 주 : 1. 한계소비성향은 평균적으로 소득증가분의 몇 % 정도를 소비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임.
- 2. 소비 C, 소득 Y라고 할 때 절대소득가설에 의한 소비함수를 설정하면  $C_t = \alpha + \beta Y_t + u_t$ 로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t는 시간,  $\alpha$ 는 상수항,  $u_t$ 는 오차항임. 따라서 상기의 식을 회귀분석을 통해 한계소비성향을 얻을 수 있음.
- 3. 분석에 이용된 원데이터는 명목 기준임.

- 이처럼 한계소비성향이 감소하는 이유는 국내 가계의 비소비지출 부담과, 교육 및 보건 관련 지출이 지속인 증가세를 보이면서 소비 여력을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임
- 국내 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2008년 1/4분기 11.4%에서 2009년 1/4분기 1.9%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증가하고 있음
- 동 교육비 지출 증가율도 동기간 14.9%에서 6%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증가세는 지속
- 한편, 보건 관련 지출도 여전히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음

< 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 부문별 소비 증가율 추이 >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08년				2009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소득	6.7	9.4	7.8	3.5	0.0
가계지출	9.0	9.4	6.9	3.8	-2.3
소비지출	8.3	9.5	5.7	3.7	-3.5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7.7	10.3	8.1	7.9	-3.0
주류 및 담배	-2.6	-2.0	-3.3	-4.1	-11.9
의류 및 신발	8.3	9.8	3.0	-2.3	-2.7
주거 및 수도광열	7.3	8.8	7.0	1.5	3.1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3.2	-7.7	2.2	-4.5	-2.3
보건	7.7	3.6	6.0	11.6	7.0
교통	8.3	16.1	0.3	-2.1	-17.9
통신	-1.5	0.7	-0.2	-2.2	-4.5
오락·문화	17.8	2.9	-6.0	-4.6	-10.0
교육	14.9	21.8	19.6	17.3	6.0
음식·숙박	7.4	9.8	5.6	3.1	-5.0
기타상품서비스	8.0	7.6	1.4	6.2	-9.0
비소비지출	11.4	9.2	10.6	4.3	1.9

자료 : 통계청.

- (새로운 내수 산업 육성 부재) 국내 내수 산업으로는 2004년 정보통신업이 새롭게 등장한 이외에 큰 변화가 없을 뿐 아니라 내수 산업이 매우 영세하고 경쟁력도 약한 등 새로운 내수 산업 육성이 미흡함
  - 국내 GDP 대비 제조업 비중 1인당 GDP가 5,000달러였을 때 26%에서 1인당 GDP 2만 달러 도달 시에는 24%로 하락했다가, 2008년에는 다시 25%로 증가함
  - 반면,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우 1인당 GDP 1만 달러를 넘어선 2000년에야 비로소 정보통신업이 서비스 산업의 한 부문으로 등장
  - 한편 국내 부문별 서비스 산업의 GDP 비중을 보면, 1인당 GDP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큰 변동이 없음
    - 가장 많이 변화된 서비스업은 부동산으로 1인당 GDP 5천 달러 시 GDP의 4% 정도를 차지했으나, 현재 7%로 확대
    - 한편, 보건 및 사회복지, 교육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은 동기간 GDP 대비 비중이 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국내 서비스 산업의 GDP 대비 비중 추이 >

(%)

구분	1989년 (1인당 GDP 5,000달러)	1995년 (1인당 GDP 1만 달러)	2004년 (1인당 GDP 1.5만 달러)	2007년 (1인당 GDP 2만 달러)	2008년
제조업	26	25	25	24	25
오락문화서비스	1	1	1	1	1
보건 및 사회복지	2	2	3	4	4
교육서비스업	4	5	5	6	6
사업서비스업	3	4	4	5	5
부동산	4	6	7	7	7
정보통신업	-	-	4	4	4
음식숙박	2	2	2	2	2
도소매	10	8	7	7	8
공공행정 및 국방	5	5	5	6	6
금융보험업	6	6	6	6	6
기타서비스	2	2	2	2	2

자료 : 통계청.

- 대표적인 내수 산업인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우 자영업자 비중이 낮은 등 매우 영세함
  - 한국의 경우 서비스 산업에서 차지하는 자영업자 비중은 25.8%로 미국 7.1%, 일본 9.7%, 영국 13.1% 등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며, OECD 평균 13.8%에 비해 12%p나 높음
  - 한편, 도소매 음식숙박업과 같은 전통 서비스업의 경우 총근로자 대비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2006년 기준 한국은 47.4%에 이르는 반면 OECD 평균은 18.2%에 불과<sup>2)</sup>

< 서비스 산업에서 차지하는 자영업자 비중(2007년) >

(%)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OECD평균
25.8	7.1	9.7	13.1	8.9	11.0	13.8

자료 :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 『경제난국 극복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2009년 5월 8일.

- 대표적인 내수 산업인 국내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주요 OECD 국가들에 비해 낮고, R&D 투자가 저조한 등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임<sup>3)</sup>
  - 한국의 서비스 산업 생산성은 국내 제조업에 비해 58% 수준에 불과하며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미국의 44%, 프랑스의 52%, 일본의 55%, 영국의 66% 수준에 불과함
  - 또 2006년을 기준으로 볼 때 도소매나 음식숙박업과 같은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이 전체 고용의 26%를 차지하는 반면 금융이나 사업서비스업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비중이 12%에 불과해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생산성이 저하되는 현상을 낳고 있음

< 부문별 서비스업 고용 비중(2006년) >

(%)

도소매·음식숙박업						금융·사업서비스업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21	24	20	17	18	26	20	20	16	18	12

자료 :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 『경제난국 극복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2009년 5월 8일.

2) 주원, 「전통서비스업, 고부가 주력산업으로의 전환 필요-OECD 비교를 통해 본 국내 전통 서비스업의 문제점」, VIP Report, 현대경제연구원, 2009년 5월 19일.  
 3) 본 내용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 『경제난국 극복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2009년 5월 8일에서 인용.

- 나아가, 민간 R&D 가운데 서비스 산업 부문 R&D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기준 한국은 7.3%에 불과해 미국 29.8%, 영국 30%, 캐나다 37.3%와 매우 큰 격차가 발생

< 민간 R&D 대비 서비스업 R&D 비중(2004년) >

(%)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7.3	29.8	30	37.3	27.1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R&D투자 활성화 방안-G7 국가와의 R&D 투자 비교 분석」, VIP Report, 2009년 8월 4일.

- 1960년대 경공업 위주의 수출주도형 전략을 채용한 이래 국내 산업정책은 최근까지도 수출주도산업 육성 또는 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
  - 1960년대는 경공업, 1970년대는 중화학 공업을 중심으로 육성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들 산업이 수출을 통해 국내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유도
  - 한편, 1980년대 중반 이후 개별 산업에 대한 정부 개입 근거를 폐지하는 대신 기술개발 지원 등 시장보완적인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이마저도 수출 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거나 수출을 염두에 둔 지원이 이루어짐

< 한국 산업정책의 변화와 평가 >

기간	산업정책 방향	평가
1967~1971년	경공업 위주의 수출주도형 전략	- 본격적인 경제 발전 추진 - 경공업 위주 정책의 한계
1972~1980년	정부주도 중화학공업 육성	- 최근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의 기틀 마련 - 중화학공업의 부실화와 저생산성 문제
1981~1985년	중화학분야의 산업합리화	- 중화학분야의 구조조정 추진 - 산업합리화에 따른 막대한 조정 비용
1986~1991년	자율경쟁개방 체제로의 이행	- 정부의 특정산업 개입 근거 폐지 - 기술개발 등 시장보완적 산업정책 추진
1992~1997년	개방화와 민간주도 경제운동	- 개방화 확대. 단, 대내적인 구조적 문제점 상존 - 외환위기 발생
1998~2002년	IMF 관리체제와 산업구조조정	-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중장기 경쟁력 제고 미흡 -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 - IT 산업이 주력산업으로 부상
2003~2007년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부문 간 동반 발전	- 혁신역량 강화에 노력 - 양극화 관련 정책 티당성과 성과 논란 지속
2008~현재	녹색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현재로는 평가 불가능

자료 : 산업연구원, 「한국 산업정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e-KIET 산업경제정보, 제379호, 2008년 1월 30일 자료를 가필·수정함.

○ (농업 붕괴) 농가 인구 감소, 농가 경영주 고령화, 높은 소규모 농가 비중 등 국내 농업이 붕괴 위기에 처해 있음

- 국내 농가 인구는 1980년 1,082.7만 명에서 2005년 343.4만 명으로까지 감소하여 총 인구 대비 7.3%에 불과한 수준임
- 특히, 국내 농가 인구는 1980년 대비 1990년에 38.5% 감소하였으며, 이후 감소폭이 축소되고는 있으나, 2005년에도 2000년 대비 14.8% 감소하는 등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국내 농가 인구 변화 추이 >

(천명, %)

구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농가 인구	10,827	6,661	4,851	4,031	3,434
총인구 대비 비중	28.9	15.3	10.9	8.7	7.3
증감율	-	-38.5	-27.2	-16.9	-14.8

자료 : 김태현·이내성 편, 『푸른 들, 숲, 바다, 그리고 삶-농림어업총조사 종합분석 보고서』, 2008년.

주 : 매 5년마다의 농가 인구 증가율임.

- 전체 농가 수가 감소함과 더불어 65세 이상 고령의 농가 경영주 비중이 증가하면서 농촌 지역의 고령화가 진전
- 2005년 현재 국내 전체 농가 수는 127.3만 가구로 1990년 176.7만 가구에 비해 약 28%나 감소함
- 65세 이상 농가 경영주 비중도 1990년 18.3%에서 2000년 30.1%, 2005년 43.2%로 국내 농가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국내 농가 인구 변화 추이 >

(천명, %)

구분	1990년		2000년		2005년	
	농가	구성비	농가	구성비	농가	구성비
전체	1,767	100.0	1,383	100.0	1,273	100.0
30세 미만	37	2.1	7	0.6	2	0.2
30-39세	221	12.5	84	6.1	40	3.1
40-49세	373	21.1	238	17.2	186	14.6
50-59세	584	33.0	348	25.2	303	23.8
60-69세	403	22.8	479	34.7	430	33.8
70세 이상	150	8.5	227	16.4	311	24.5
65세 이상	328	18.3	452	30.1	549	43.2

자료 : 김태현·이내성 편, 『푸른 들, 숲, 바다, 그리고 삶-농림어업총조사 종합분석 보고서』, 2008년.

- 한편, 전체 농가 가운데 판매 규모가 3,000만 원 미만인 농가 비중이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농가가 아주 영세한 실정
- 2000년 기준 판매 규모 3,000만 원 미만 농가 비중이 93.3%에서 2005년에는 89.7%로 다소 감소는 했으나,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

< 판매 규모별 농가 분포 변화 추이 >

(천 가구, %)

구분	판매 없음	100만원 미만	100-500만원	500-1,000만원	1,000-3,000만원	3,000-5,000만원	5,000-1억원	1-2억원	2억원 이상	계
2000년	91	214	362	291	335	60	23	6	2	1,384
	6.5	15.5	26.1	21.0	24.2	4.3	1.6	0.4	0.1	100.0
2005년	120	181	356	211	273	73	41	11	5	1,271
	9.5	14.2	28.0	16.6	21.4	5.8	3.2	0.8	0.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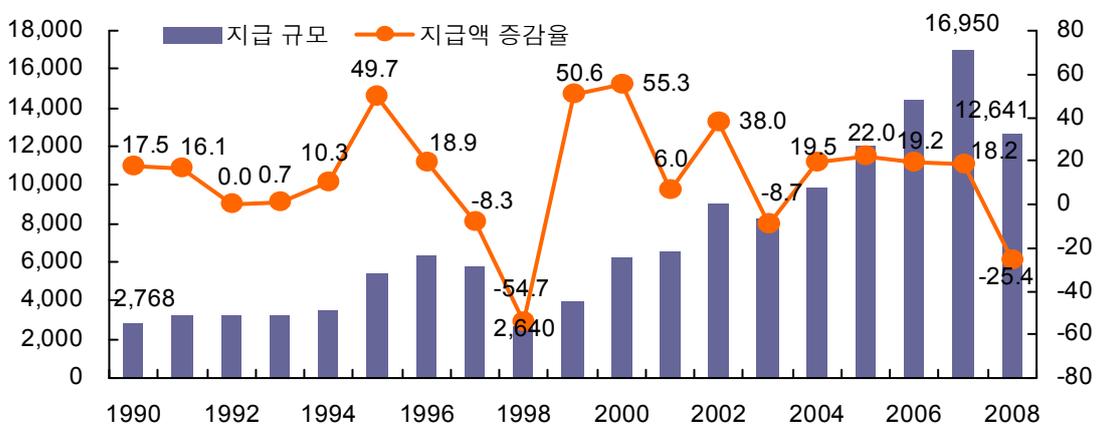
자료 : 김태현·이내성 편, 『푸른 들, 숲, 바다, 그리고 삶-농림어업총조사 종12.2합분석 보고서』, 2008년.

○ (해외 소비 증가) 1990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던 해외여행 지급 규모는 1998년 외환위기로 잠시 급락하였으나 최근 다시 급증세

- 해외여행 지급 규모는 1990년 27.7억 달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던 1998년에 26.4억 달러로 급락했으나, 2007년에는 169.5억 달러까지 급팽창
- 특히, 1990년에서 2008년까지 해외여행 지급 규모는 연평균 12.9%에 달함
- 반면, 동기간 민간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약 5%에 불과함

< 해외여행 지급 규모 및 증가율 추이 >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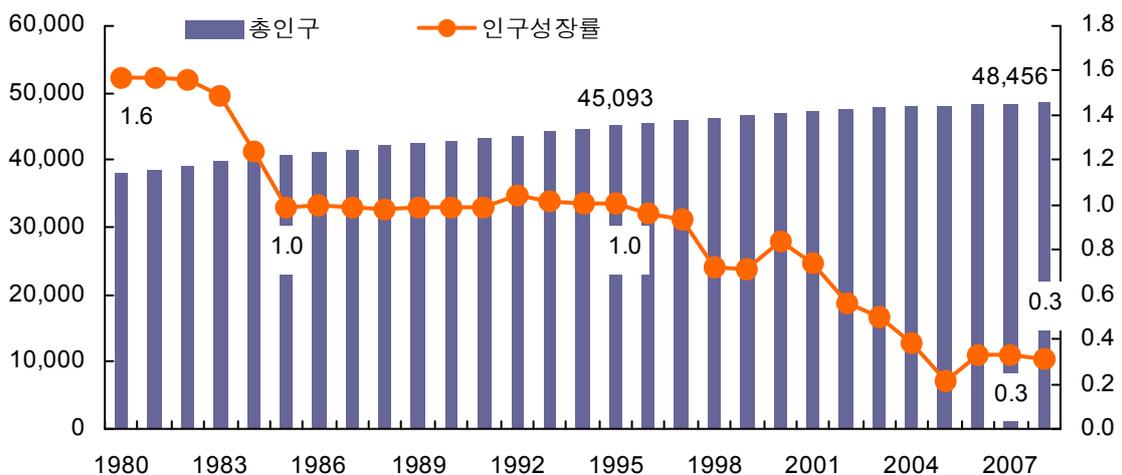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 (인구 증가율 감소로 인한 소비 기반 축소) 1980년대 초반 이후 국내 인구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약화되면서 소비 기반이 지속적으로 축소

- 국내 인구 규모는 1980년 3,812.4만 명에서 1인당 GDP가 2만 달러에 도달한 2007년 4,845.6만 명으로 전체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하고 있음
- 하지만 같은 기간 인구 증가율은 1.6%에서 0.3%로 인구 증가세가 거의 정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한편, 1인당 GDP 1만 달러 도달 시와 2만 달러 도달 시를 비교해보면 규모는 증가한 반면, 인구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1995년 1인당 GDP 1만 달러 도달 시 인구 규모는 4,509.3만 명이었으나, 2만 달러에 도달한 2007년에는 4,845.6만 명으로 336.3만 명 증가
  - 하지만 동기간 인구 증가율은 1.0%에서 0.3%로 0.7%p나 악화됨
- 더욱이 국내 소비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3~40대 연령층 비중이 2005년 34.7%에서 2009년에는 34%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sup>4)</sup>

< 전체 인구 규모 및 증가율 추이 >

(천 명, %)



자료 : 통계청.

4) 2005년까지는 확정치이며 이후는 추정치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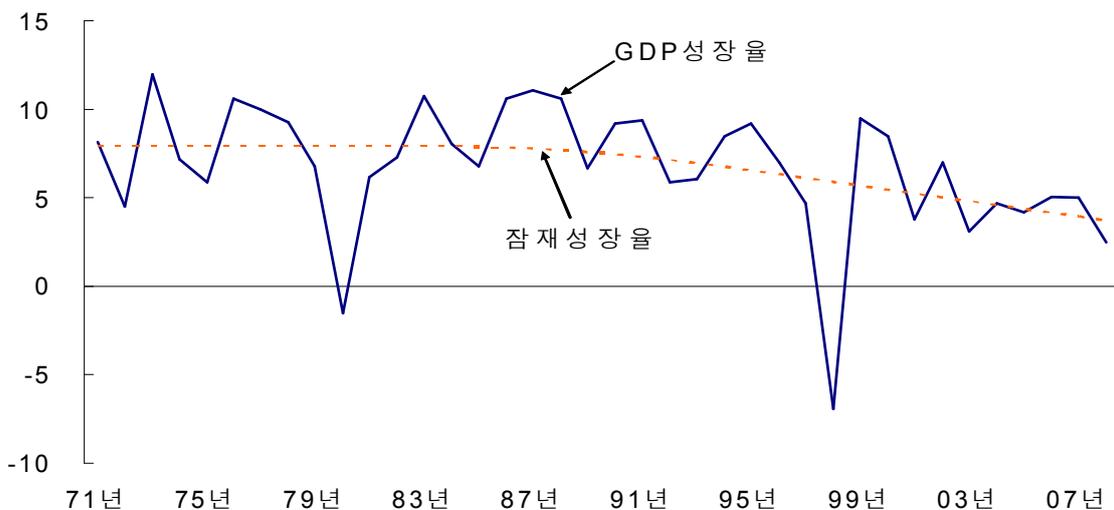
## 2. 문제점

○ (성장 동력 약화) 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의 성장기여도 하락으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수 산업마저 육성이 어려울 경우 전체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큼

- HP 필터링을 통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해 본 결과 2000~2006년 사이 평균 4.8%였던 잠재성장률이, 2007년 이후 3% 중반으로 하락
- 잠재성장률 하락 원인은 투자와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 공급이 둔화되고 제조업의 부가가치유발효과도 둔화되는 등 생산성 하락 때문
  -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인해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1978년 3.2%에서 1991년 2.1%, 2008년 1.1%까지 하락하였을 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 증가율도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노동 공급이 약화되고 있음
  - 한편, 제조업 부가가치유발효과도 2000년 0.664에서 2007년 0.626으로 하락하여 제조업의 산업연관효과가 약화되고 있음

< 잠재성장률 추이 >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 이로 인해 한국은 OECD 주요국들보다 성장 속도도 느림
- OECD 주요국들이 1인당 GDP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성장하는데 적게는 4년에서 많게는 11년이 걸렸으나, 한국은 12년으로 비교 대상 국가들에 비해 길고, GDP에서 차지하는 소비 비중도 많게는 14%p나 낮음
- 1인당 GDP 2만 달러 도달 시 GDP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소비 비중은 69%로 캐나다 77%, 프랑스 79%, 이탈리아 78%, 영국 83%, 미국 82%보다 낮아 적게는 8%p 많게는 14%p나 낮은 수준임
- 더욱이 OECD 주요국들이 1인당 GDP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성장하면서 GDP 대비 투자 비중은 거의 변동이 없으나, 한국은 큰 폭으로 축소
- 1인당 GDP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도달 시 한국(2007년)의 GDP 대비 총고정자본형성 비중은 36%에서 29%로 7%p 하락

< OECD 주요국 1인당 GDP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변화 시 소비 비중 추이 >

(명목, 자국통화기준, %)

구분	1만 달러 달성	2만 달러 달성	도달 기간	GDP 대비 소비 비중 추이					
				총소비		민간소비		정부소비	
				1만달러	2만달러	1만달러	2만달러	1만달러	2만달러
캐나다	1980년	1989년	9년	75	77	54	56	21	21
프랑스	1979년	1990년	11년	77	79	56	57	21	22
이탈리아	1986년	1991년	5년	77	78	59	58	18	20
일본	1984년	1988년	4년	69	67	55	54	14	13
영국	1986년	1996년	10년	82	83	61	64	21	19
미국	1978년	1988년	10년	71	82	56	66	15	17
한국	1995년	2007년	12년	64	69	53	54	11	15

자료 : OECD.

주 : 소숫점 이하 생략.

< OECD 주요국 1인당 GDP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변화 시 투자 비중 추이 >

(명목, 자국통화기준, %)

구분	1만 달러 달성	2만 달러 달성	도달 기간	GDP 대비 투자 비중 추이					
				총고정자본형성		건설투자		설비투자	
				1만달러	2만달러	1만달러	2만달러	1만달러	2만달러
캐나다	1980년	1989년	9년	23	23	15	14	7	7
프랑스	1979년	1990년	11년	23	21	15	13	6	7
이탈리아	1986년	1991년	5년	22	22	12	12	10	10
일본	1984년	1988년	4년	28	30	10	11	18	19
영국	1986년	1996년	10년	18	17	9	8	9	8
미국	1978년	1988년	10년	17	19	10	10	7	8
한국	1995년	2007년	12년	36	29	21	18	14	9

자료 : OECD, 일본 내각부.

주 : 소숫점 이하 반올림하여 생략.

○ (고용 부진 심화) 수출 중심의 제조업 분야의 경우 이미 기술혁신, 투자 부진 등으로 고용 창출 능력의 한계에 봉착함에 따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 산업 육성이 지연될 경우 고용 부진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 수요 항목별로 취업유발효과를 보면 2007년 기준으로 소비와 투자가 10억 원 당 17.1명, 13.1명이고, 수출이 9.4명으로 나타나 내수 부문의 고용유발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남
- 지난 2000년에서 2007년 사이 수요항목별로 취업유발효과를 살펴보면, 수출 10억 원 당 취업 유발자 수는 15.3명에서 9.4명으로 약 39% 감소하였으나, 소비는 21.4명에서 17.1명으로 20% 감소, 투자는 15명에서 13.1명으로 12.7% 감소에 그침

< 수요항목별 취업유발계수 추이 >

(명/10억 원)

구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소비	21.4	17.8	17.3	17.1
투자	15.0	13.6	13.5	13.1
수출	15.3	10.8	9.9	9.4

자료 : 한국은행.

- 한편 산업별로도 2007년 기준 10억 원 당 제조업은 9.2명에 불과한데 반해 서비스업은 18.1명으로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산업 13.9명에 비해서도 약 4명 정도의 추가 취업유발 효과가 있음

<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추이 >

(명/10억 원)

구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농림어업	62.9	51.1	50.2	46.8
광업	9.8	10.4	10.1	10.3
제조업	13.2	10.1	9.6	9.2
전력·가스·수도	5.3	3.6	3.5	3.5
건설업	17.0	16.6	17.3	16.8
서비스	21.5	18.4	18.2	18.1
전산업	18.1	14.7	14.3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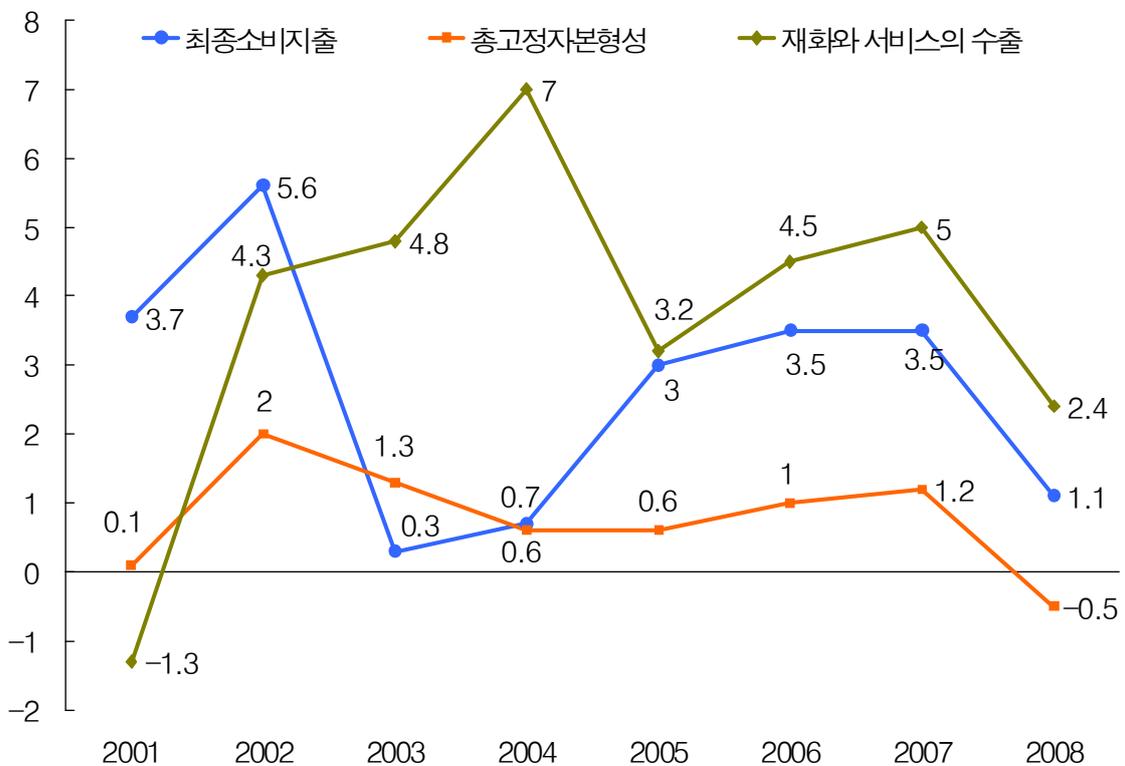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 (경기 양극화 심화) 내수 산업 침체가 지속될 경우 수출 산업과 내수 산업 간 경기 양극화로 외수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상승하면서 경제 전체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임

- 최근 들어 내수 침체가 지속되면서 내수와 외수(수출) 간 성장기여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내수 부문(최종소비지출과 총고정자본형성)의 성장기여도는 2005년 3.6%p 외수(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의 성장기여도 3.2%p를 상회했으나, 2006년에는 내수 3.6%p, 외수 4.5%p로 역전
- 2007년에는 내수 4.2%p, 외수 5%p로 외수의 성장기여도가 0.8%p 높았으며, 2008년에는 내수 0.6%p, 외수 2.4%p로 외수의 성장기여도가 1.8%p 높게 나타나 내·외수 간 성장기여도 차이가 확대

< 내수와 외수의 성장기여도 추이 >

(%p)



자료 : 한국은행.

○ (국부 유출) 서비스업, 도소매업 등 내수 산업이 육성되지 못할 경우 국내 소비로 충당되지 못한 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국부 유출로 연결됨

- 한국의 서비스 수지는 1989년 이후 적자를 기록하다 1998년 외환위기로 일시적으로 흑자로 반전되었으나 이후 적자세가 지속되면서 2008년에는 167.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
- 한편, 서비스 부문 가운데 운수서비스, 건설서비스, 금융서비스, 정부서비스를 제외한 7개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은 대폭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08년 기준 운수서비스는 63.9억 달러, 건설서비스는 2.4억 달러, 금융서비스는 29.4억 달러, 정부서비스는 9.3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
  - 하지만, 동기간 여행 80.5억 달러, 통신 4.3억 달러, 보험 5억 달러, 컴퓨터 및 정보 2.7억 달러, 특허권 등 사용료 31.4억 달러, 사업 145.1억 달러, 개인/문화/오락 3.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전체 11개 서비스 부문에서 7개 부문이 대폭적인 적자를 기록

< 한국의 부문별 서비스 수지 추이 >

(백만 달러)

구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8년
운수	-472.7	293.5	-819.0	-372.9	2,638.9	3,723.9	6,394.1
여행	19.7	178.4	393.1	-1,190.3	-297.6	-9,600.3	-8,047.1
통신	25.2	47.3	232.8	-80.9	-235.2	-330.1	-431.9
건설	.	.	.	.	13.3	104.5	243.6
보험	46.1	-76.0	24.3	-274.6	-77.8	-564.0	-504.8
금융	-12.6	-44.3	-10.3	-24.7	513.6	1,415.8	2,943.1
컴퓨터 및 정보	-4.4	-10.7	-46.9	-88.4	-81.2	-125.8	-266.2
특허권 등 사용료	-99.0	-319.6	-1,327.3	-2,085.6	-2,533.0	-2,652.4	-3,139.5
사업	-230.4	248.9	678.8	954.3	-3,128.3	-6,115.2	-14,510.6
개인, 문화, 오락	-13.3	-4.6	-19.8	-97.9	-23.3	-209.2	-341.9
정부	18.4	145.7	279.4	282.2	362.8	685.6	927.6
전체	-723	458.6	-614.9	-2,978.8	-2,847.8	-13,658.2	-16,7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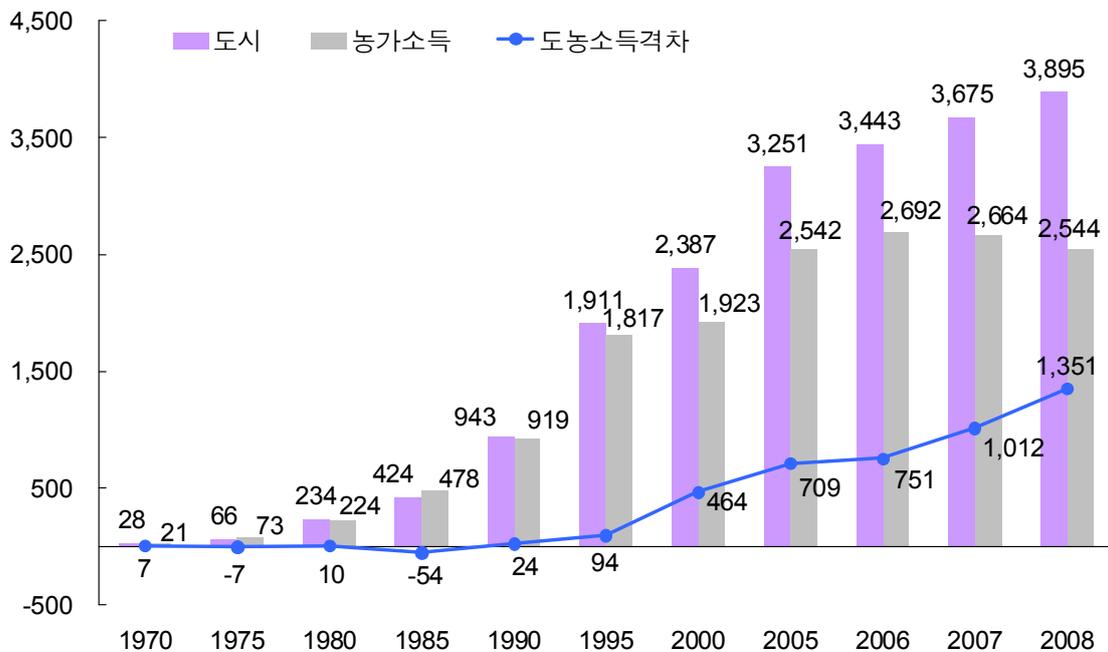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 (도·농간 소득 격차 확대) 농업이 붕괴되면서 농촌 지역의 소득 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반면 도시 근로자 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도·농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농업이 붕괴되면서 농가 소득 증가가 2006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됨
  - 농가 소득은 2005년 269.2만 원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2007년 266.4만 원, 2008년 254.4만 원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한편 도시 가구 소득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도시 가구 소득은 1989년 80.5만 원으로 농가 소득 78.6만 원을 앞지른 이래 지속적인 우위를 지키고 있을 뿐 아니라 2008년 현재 389.5만 원까지 상승함
- 더욱이 도시 가구 소득과 농가 소득과의 차이는 점차 확대되어 1995년 9.4만 원에서 2008년에는 135.1만 원으로 소득 격차가 14.4배 상승함

< 한국의 도시와 농가 소득 추이 >

(천 원)



자료 : 통계청.

### Ⅲ. 내수 확충 방안

○ (경제 성장 전략의 방향 전환) 지금까지 경제 성장 전략이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산업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지금부터는 내수 산업과 수출 산업의 균형 발전 전략의 추진이 필요함

- 국내 경제의 외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 외수 경기가 급변으로 인해 국내 경기가 큰 변동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내수 산업과의 균형 성장 전략을 통해 외수 경기 급변에도 전체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양적 질적 투자 촉진으로 국내 소비 기반 확대) 규제완화 등을 통해 전체 민간 기업 투자 규모의 확대 뿐 아니라 R&D 등에 대한 투자 증대를 통해 내수 확대 뿐 아니라 성장 잠재력을 확충시키는 것이 중요함

-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각종 기업 투자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함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와 같은 투자 촉진 제도는 한시적으로 유지하되, 기타 현행 투자 촉진제도의 경우 재정 지출 대비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제도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함

- R&D 관련 투자 촉진을 위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부문의 구체적인 추진 전략과 과제들을 도출해내고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한편, 선진국의 경우 경제 규모의 확대에 따라 서비스업 비중이 커지면서 경쟁력도 높아졌으나,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우 R&D 투자가 매우 저조한 형편으로 정책 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서비스업의 R&D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또, 기업의 인재 확보·육성·활용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투자 증대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 (국내 소비 기반 확대) 관광, 교육, 사업서비스 등 해외 소비 규모가 크고 증가 속도가 빠른 산업의 육성·발전을 통해 해외 소비를 국내로 환원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소득 불균형을 축소시킴으로써 가계의 소비 기반을 강화시키는 등 국내 소비 기반을 확대시켜야 함

- 관광, 교육, 사업 서비스 등 해외 소비 규모가 커 국부 유출이 심각한 산업 부문을 집중 육성·발전시킴으로써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환류시켜야 함
  - 관광 부문의 경우, 지역 자산의 관광상품화 촉진, 숙박시설 등의 관광 인프라 개선, 다양한 패키지 관광 상품의 개발 등을 통해 국내 관광의 양과 질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 연계하는 관광 루트의 개발 등을 통해 내국인 관광 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 유입을 촉진시켜야 함
  - 교육부문의 경우는 지속적인 개혁 추진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국내 기업들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체제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법률, 회계, 비즈니스컨설팅 등과 같은 사업 서비스의 경우, 글로벌 스탠다드 보급을 촉진시키고, 인력 양성 및 보급 확대, ODA 연계를 통한 해외 진출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반면 부유층의 소비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국내 소비 여력이 하락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함
  - 저소득층에 대한 비소비지출 부담 경감, 사회보장 강화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확대시켜야 함
  - 한편, 고소득층이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특별소비세를 인하한다든지, 시민 의식의 전환을 위한 홍보 확대 등을 통해 고소득층의 국내 소비를 촉진시켜야 할 것임

○ (제2의 농업부흥을 위한 전략 마련) 기업형 농가 육성 촉진, 귀농 지원 강화, 농업과 문화, 관광 등을 연계한 지역 특화 산업의 상품화 촉진 등을 통해 농업붕괴를 방지하여 농업 부문의 내수 기여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제2의 농업 부흥 전략이 필요함

- 민간의 농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농업인 출자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우수한 법인 농가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 개선을 통해 기업형 농가의 육성을 촉진시켜야 함
  - 또,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농촌지역이 황폐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귀농 지원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한편, 지역 특화 농산품과 지역 고유의 문화 및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특화 산업을 상품화함으로써 지역 농업은 물론 지역 관광 발전을 통해 농촌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병원, 학교, 문화 등 농촌지역의 부족한 사회 인프라를 강화하고, 농촌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 운동을 통해 농촌 지역의 생활의 질을 제고시킴으로써 귀농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농촌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함
- (저출산 대책 강화) 저출산 현상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인구 정책 추진을 통해 소비 기반의 지속적인 축소를 방지해야 함
- 보육 및 교육 환경 개선, 친여성적인 근무환경 조성 등을 통해 여성의 출산 및 사회적 활동 의지를 제고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한편, 저출산 문제는 일과 생활의 불균형, 자녀 교육, 주택 문제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과 밀접히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전 사회적인 관심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부형 연구위원(3669-4011, lbh@hri.co.kr)

허지은 연구원 (3669-4131, me-2@hri.co.kr)

주요 국내의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년		2009 (E)
				1/4	2/4	3/4	4/4	1/4	2/4	
미국	2.8	2.0	1.1	0.9	2.8	-0.5	-6.3	-5.7	-1.0	-2.6
EU	2.9	2.7	0.8	0.6	-0.2	-0.2	-1.6	-2.5	-	-4.8
일본	2.0	2.3	-0.7	1.4	-3.5	-2.9	-13.5	-14.2	-	-6.0
중국	11.6	13.0	9.0	10.6	10.1	9.0	6.8	6.1	7.9	7.5
한국	5.2	5.1	2.2	5.5	4.3	3.1	-3.4	-4.2	-2.5	-3.0

주 1) : 2008년, 2009년 1/4분기 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잠정치(P), 2009년 전망치(E)는 IMF 2009년 7월 기준임.

2) :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구분	2007년 말	2008년 말	2009년				전주비
				3월말	6월말	8월 7일	8월 14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4.02	2.21	2.66	3.54	3.75	3.60	-0.15%p
	엔/달러	112.58	90.22	97.34	96.14	95.49	95.38	-0.11 ¥
	달러/유로	1.4722	1.4125	1.3190	1.4083	1.4362	1.4282	-0.008\$
	다우존스지수	13,265	8,776	7,609	8,447	9,256	9,398	142p
	닛케이지수	15,380	8,860	8,110	9,958	10,388	10,517	129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5.74	3.41	3.94	4.16	4.46	4.53	0.07%p
	원/달러	936.1	1,259.5	1,383.5	1,273.9	1,225.0	1,239.2	14.2원
	코스피지수	1,897.1	1,124.5	1,206.3	1,390.1	1,576.0	1,591.4	15.4p

주 : 8월 14일 해외 지표는 전일(8월 13일) 기준임.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구분	2007년말	2008년말	2009년				전주비
				3월말	6월말	8월 7일	8월 14일	
국제 유가	WTI	95.97	44.61	49.65	69.08	71.99	70.97	-1.02\$
	Dubai	89.30	36.45	46.80	71.85	73.17	72.24	-0.93\$
CRB선물지수		358.71	229.54	220.40	249.96	264.77	265.15	0.38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